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훈련결과보고서

부처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기관 운영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기

[목차]

I.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범위 및 방법

II. 본론

-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 현황
- 부처의 특성 분석
- 효율적 기관 운영 방안 연구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HR)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다양한 관련 학문들을 정립하였다
- 조직행동론은 조직의 성과(생산성,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의 개인, 집단, 조직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학제적 성격을 띤 행동과학을 뜻하고,
-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 인적자원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을 확보, 개발, 배치, 평가하는 일련의 내용들을 뜻한다.(참고자료: 중앙대학교 인사조직관리 수업자료)
- 하지만, 이러한 학문 및 이론들은 경제학, 사회학 등 오랜시간 인정되고, 수용된 전통적 사회과학과는 다르게 비교적 늦게 생성되어 발전한 새로운 학문이고,

- 조직행동 연구의 분석 대상이 다양한 학문들을 망라하는 학제적(통합적) 성격을 띄고 있기에
 - 이론과는 다른 현실의 제한적인 환경에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 공공기관, 사기업, 공기업 등 조직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는 연구 및 분석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 물론 현재로서는, 기관 또는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학문적인 분석과 해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 조직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및 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대상, 범위 및 방법

- 연구배경에서도 기술했듯이 실효성 있는 연구 및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범위를 최대한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연구대상을 훈련생이 재직 중인 정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설정하여,
 -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마약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기관
 운영 방안 연구'로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 연구범위는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반 현황에
 대한 분석부터,
 - 해당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연구대상 기관의
 고유한 특성 발굴(크게 3가지로 나누어 기술),
 - 이를 통한 기관 운영의 문제점(또는 한계점) 및
 효율적 운영 방향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구방법은 학사야간과정 훈련 수행 보고서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존에 등재된(검증된) 기관(조직)
 운영과 관련된 논문 자료를 참고(인용)하고, 통계청
 자료 등 공인된 기초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 진행 및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또한, 연구대상을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설정하였기에, 타 기관 비교 및 관련 논문 인용 등도 이와 유사한 조직인 국가기관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II. 본론

1)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반 현황

- 소관 사무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주류 등 포함),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

- 기관 연혁

1998. 2. 28.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아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치됨(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시작)

1999. 5. 24.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 의약품 안전 관련
기능 중 일부 이관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의 외청

2010. 3. 19. 보건복지부의 외청

2013. 3. 23.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농축수산물 위생
안전 관련 사무,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
의약품 안전 정책 관련 사무를 이관 받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 정원 변화

1999년 1차 개정 당시 정원 752명

→ 2021년 30차 개정 기준 정원 1,998명

□ 조직 구성

본부(8국, 2기획관) 및 7개 소속기관(평가원 및 6개
지방청)

* 8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산하기관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홈페이지

□ 처 본부 조직도



< 사진 1.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조직도(출처: 식약처 홈페이지) >

□ 소속기관(평가원 및 6개 지방청) 조직도



< 사진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직도(출처: 식약처 홈페이지) >



< 사진 3. 6개 지방청 조직도(출처: 식약처 홈페이지) >

2)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성 분석

□ 직무 분야 및 인력 구성의 다양성

○ 직렬의 다양성

- 연구대상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일반 현황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소관사무의 범위가 타 부처(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광범위하다.
 - *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주류 등 포함),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의 안전
- 소관사무가 광범위하고, 각 사무의 영역에서 개별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조직을 구성하는 직원들의 직렬 또한 소관사무 범위에 비례하여 다양성을 가진다.
- 훈련 계획서에서 기술했듯이 식약처를 구성하는 직렬은 행정, 식품위생, 약무, 수의, 의료기술, 전산, 연구, 관리운영, 시설, 공업, 해양수산, 운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인력 구성을 직렬이 아닌 직군 단위로 크게 나누어 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세 가지 직군이 1개 조직에 근무하는 형태인데,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 공인된 자료를 보았을 때, 21년도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반·기술·관리운영 직군 공무원 수는 1,296명이고, 연구직 공무원 수는 846명, 그 외 임기제 및 별정직 등의 수는 55명으로 확인되었다.
- 이를 통해, 조직을 구성하는 직군별 비율을 계산해보면, 행정기술 직군 58%, 연구직군 38%으로,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조직으로 확인된다.

KOSIS 국가통계포털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국내통계 국제·북한통계 쉽게 보는 통계 온라인간행물 민원안내 서비스 소개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어린이

통합검색 ▼ 부처별 ▼ 🔍 상세검색 ▼ ☐ 결과 내 재검색

인기검색어

통합검색 통계표 통계분류 온라인간행물 통계설명자료 통계용어 게시물

"부처별"에 대한 검색결과는 185건입니다.

통계표 : 185건		+ 더보기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2013 ~ 2021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부처별 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소재통계, 2018 ~ 2021
생명연구자원 부처별 확보 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소재통계, 2010 ~ 2021
부처별 특장직공무원 계급별 현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2017 ~ 2021
부처별 직종별 여성공무원 비율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2017 ~ 2021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직급별 현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2017 ~ 2021

통계설명자료
내기본통계표
내가 검색어
코봇

< 사진 4. 국가통계포털 화면(https://kosis.kr) >

- 또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타 중앙행정기관들의 전체 현원 중 연구직 공무원 비율과 비교해 본 결과,
- '농촌진흥청'이 62%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 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8%, '환경부'가 26%, '질병관리청'이 25% 등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행정기관명	전체 현원	행정·기술직 등	연구직	연구직 비율
합계	756,519	142,447	6,086	1%
농촌진흥청	1,953	573	1,209	62%
식품의약품안전처	2,206	1,296	846	38%
환경부	2,709	1,885	693	26%
행정안전부	4,090	3,263	523	13%
문화체육관광부	3,143	2,073	480	15%
질병관리청	1,633	1,052	401	25%
해양수산부	4,302	3,731	359	8%
산림청	1,999	1,504	268	13%
농림축산식품부	3,861	3,433	249	6%
문화재청	1,091	700	225	21%
기상청	1,461	1,260	145	10%
교육부	377,921	7,028	129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390	12,003	103	0%
산업통상자원부	1,556	1,365	90	6%
경찰청	135,528	4,850	71	0%
대검찰청	10,977	8,691	70	1%
보건복지부	2,714	2,515	34	1%
국토교통부	4,540	4,362	25	1%

국가보훈처	1,522	1,407	23	2%
중소벤처기업부	1,421	1,083	22	2%
소방청	61,157	25	19	0%
해양경찰청	12,302	1,224	16	0%
기타 정부기관	739	255	13	2%
병무청	2,059	1,906	12	1%
국세청	23,298	22,996	8	0%
고용노동부	8,748	8,388	7	0%
관세청	5,672	5,169	6	0%
법무부	23,821	23,268	6	0%
외교부	2,835	534	4	0%
국방부	1,138	986	2	0%
금융위원회	365	321	2	1%
법제처	285	266	2	1%
새만금개발청	142	120	2	1%
통일부	674	588	2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80	169	2	1%
감사원	1,132	1,069	1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8	150	1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3	47	1	1%
공정거래위원회	717	664	1	0%
국가인권위원회	265	237	1	0%
국무조정실	503	468	1	0%
국무총리비서실	113	62	1	1%
국민권익위원회	563	517	1	0%
기획재정부	1,314	1,267	1	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8	78	1	1%
방송통신위원회	325	295	1	0%

방위사업청	1,182	1,039	1	0%
여성가족부	338	307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189	180	1	1%
인사혁신처	652	563	1	0%
조달청	1,158	1,104	1	0%
통계청	2,338	2,280	1	0%
특허청	1,969	1,831	1	0%

※ 비교를 위해 일반·기술·관리운영직렬과 연구직렬 외 데이터 삭제

< 표 1. 식약처 연구직 공무원 비율(출처: 국가통계포털)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직렬 기준으로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이 높고, 전체 중앙행정기관 대비에서도 연구직 공무원 비중이 높은 기관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 직렬의 다양성 파트에서는 '연구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검토하여 이를 고려한 효율적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다양한 공무직 근로자 구성

-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은 매우 다양하다.
-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렬 다양성은 부처 소관사무가 광범위함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직렬 뿐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하다.

* 행정 및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실무원 직종, 국제회의 통역 및 외국자료 수집·분석 업무를 위한 외국어 에디터 직종, 식품·의료제품의 허가·심사자료 검토를 위한 심사관 직종, R&D 등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시험 연구원 직종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무원 직렬의 다양성과 같이 공무직 근로자들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 이어서 전체 직원 수 중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비율 및 그 직원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타 중앙행정기관과 대비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만의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공무원 직렬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까지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력 구성과 직무 분야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 직무 분야 및 인력 구성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의 특성이

정부부처라는 이유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기관 운영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기관들을 모델로 하여 우수한 예시를 모색하고,

- 이와 유사한 기관 운영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주요 수행업무
직종	등급	
사무실무원	-	각종 사업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술·수거·검사·관리 등의 지원·보조 등
외국어 에디터	가급	국제회의 통역, 외국자료 수집 또는 분석 등 외국어 통·번역 등(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나급	
	다급	
청사관리원	-	청사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환경미화 등
심사관	가급	식품·의약품(의약외품, 한약, 화장품, 마약류 등 포함)·의료기기 등 허가심사자료 검토 지원 등
	I	
	II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심사보조원	-	식품·의약품(의약외품, 한약, 화장품, 마약류 등 포함)·의료기기 등 허가·심사업무 지원·보조 등

구 분		주요 수행업무
직종	등급	
연구위원	가급	법령 상 위원회 소속으로, 국제기준·규격 조사,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조사·기획·연구 등
	나급	
연구원	가급	
	나급	
정책연구원	가급	정책개발 또는 주요현안과제 등에 대한 조사·기획·연구 등
	나급	
전문연구원	가급	자체연구개발사업(R&D) 등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기획·시험·연구 등
	나급	
	다급	
시험연구원	가급	자체연구개발사업(R&D) 등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 지원·보조 등
	나급	

< 표 2. 식약처 공무원 근로자 직무범위(식약처 우수인재채용 사이트)

>

□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조직 구성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인한 결과,
- 전체 현원 2,206명 중 여성공무원 현원은 1,355명으로, 기관 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61.4%를 차지한다.
- 국가직 공무원 전체 현원 756,519명 중 여성 공무원 합계 364,927명,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48.2%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 평균 대비 약 13.2%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이러한 차이 또한,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소관 사무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력 구성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이외에 '식품위생직 공무원', '약무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 해당 기술 및 연구직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 및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및 지원자 또한 보건 계열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들로 해당 계열은 남성
비율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 국가통계포털(KOSIS)를 확인해보면, 전체 18개 산업
중 여성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4개 산업으로 확인되고, 이 중 보건 관련 산업에서 타 산업
대비 남녀 종사자 수 성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성별	종사자 수
전체	계	17,181,055
	남자	10,004,827
	여자	7,176,228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계	42,559
	남자	31,556
	여자	11,003
B.광업(05~08)	계	12,859
	남자	11,571
	여자	1,288
C.제조업(10~34)	계	3,763,370
	남자	2,813,128
	여자	950,242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계	66,663
	남자	55,546
	여자	11,117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계	96,373
	남자	81,187
	여자	15,186
F.건설업(41~42)	계	1,362,099
	남자	1,169,760
	여자	192,339
G.도매 및 소매업(45~47)	계	2,207,094
	남자	1,260,289
	여자	946,805

H.운수 및 창고업(49~52)	계	713,377
	남자	587,842
	여자	125,535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계	1,312,540
	남자	509,332
	여자	803,208
J.정보통신업(58~63)	계	571,619
	남자	391,788
	여자	179,831
K.금융 및 보험업(64~66)	계	677,711
	남자	295,798
	여자	381,913
L.부동산업(68)	계	412,212
	남자	271,139
	여자	141,073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계	1,116,539
	남자	739,834
	여자	376,705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계	1,132,661
	남자	616,863
	여자	515,798
P.교육 서비스업(85)	계	834,702
	남자	344,160
	여자	490,542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계	2,100,012
	남자	390,283
	여자	1,709,72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계	247,721
	남자	130,209
	여자	117,512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계	510,944
	남자	304,542
	여자	206,402

< 표 3. 산업별 종사자의 성비(출처: 국가통계포털)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체 기관 중 4위로 확인되었으나, 1위를 기록한 교육부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교원)의 숫자가 포함된 통계로, 이를 제외하고 결과를 재산출해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이고, 그 다음으로 질병관리청, 그 다음 순서에 이번 연구대상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명	전체 현원	여성 현원	여성 비율
합계	756,519	364,927	48.2
교육부	377,921	272,320	72.1
여성가족부	338	230	68.0
질병관리청	1,633	1,062	65.0
식품의약품안전처	2,206	1,355	61.4
보건복지부	2,714	1,661	61.2
병무청	2,059	1,176	57.1
고용노동부	8,748	4,931	56.4
국가보훈처	1,522	849	55.8
문화체육관광부	3,143	1,628	51.8
법제처	285	147	51.6
국가인권위원회	265	135	50.9
통계청	2,338	1,183	50.6
관세청	5,672	2,707	47.7
국세청	23,298	10,954	47.0
국방부	1,138	530	46.6
인사혁신처	652	302	46.3
통일부	674	311	46.1
농림축산식품부	3,861	1,763	45.7
기상청	1,461	666	45.6
환경부	2,709	1,141	42.1
외교부	2,835	1,167	41.2

문화재청	1,091	437	40.1
국민권익위원회	563	224	39.8
방송통신위원회	325	129	39.7
대검찰청	10,977	4,346	3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80	71	39.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8	66	39.3
공정거래위원회	717	279	38.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8	34	38.6
금융위원회	365	138	37.8
방위사업청	1,182	429	36.3
조달청	1,158	419	36.2
국무조정실	503	177	35.2
산업통상자원부	1,556	545	35.0
농촌진흥청	1,953	677	34.7
기획재정부	1,314	435	33.1
행정안전부	4,090	1,337	32.7
국무총리비서실	113	36	31.9
중소벤처기업부	1,421	454	31.9
기타 정부기관	739	230	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390	10,708	30.3
특허청	1,969	565	28.7
원자력안전위원회	189	54	28.6
산림청	1,999	549	27.5
감사원	1,132	292	25.8
해양수산부	4,302	1,104	25.7
국토교통부	4,540	1,126	24.8
새만금개발청	142	34	23.9
법무부	23,821	4,401	1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3	13	17.8
경찰청	135,528	21,852	16.1
해양경찰청	12,302	1,439	11.7
소방청	61,157	6,109	10.0

< 표 4. 부처별 현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출처: 국가통계포털) >

- 전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이 3번째로 높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 이는 무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렵고, 기관 운영시 해당 사항을 염두해두고, 부처의 특성에 맞는 기관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본부 소재지가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부처

- 2010년 이전, 식약처 본부는 서울 불광동에 위치하였으나, 2010년도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으로 본부 청사를 이전하였다.
- 이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고, 대부분의 정부부처(본부 소재지)가 세종시로 이주하였다.
- 이제는 세종시 이주 기관의 수와 현재까지 본부(본청) 소재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의 수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에 잔류한 부처의 수가 월등히 적다.
- 몇 남지 않은 수도권 소재 정부부처 또한 매년 세종시 이전이 언급되기에, 지방 이전 정부부처의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이전 기관 수	이전 공무원 수	이전 기관 현황
1단계 (2012년)	중앙행정기관(9개) 소속기관(6개)	6,318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단계 (2013년)	중앙행정기관(6개) 소속기관(10개)	11,317명 (+ 4,999)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3단계 (2014년)	중앙행정기관(9개) 소속기관(6개)	13,676명 (+ 2,359)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4단계 (2016년)	중앙행정기관(9개) 소속기관(6개)	15,477명 (+ 1,801)	(구)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 2017년 행정안전부 및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이전

** 지자체 등에서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기관에 대한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표 5. 중앙행정기관 단계별 이전 현황(출처: 정책브리핑) >

- 정부부처가 이전한다는 의미는 해당 부처에 근무 중인 작게는 몇 백, 크게는 몇 천명의 재직 공무원의 생활 영역이 바뀐다는 의미이고,
- 1개 부처가 아닌 대다수의 부처가 이전한다는 것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
- 이러한 큰 변화에 따라, 지방 이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논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식약처의 경우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는 아니지만, 세종시와 충북 오송은 거리가 가깝고, 비슷한 시기에 지방 이전을 했다는 점에서,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유사한 근무 환경이라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연구들을 위주로 부처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3) 효율적 기관 운영 방안

PART 1. 직무 분야 및 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관 운영 방안 연구

□ 연구직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 연구직 공무원 관련 인사제도 개관

- 현재 대한민국 일반직 공무원 인사관리제도
분류체계는 1급~9급까지 분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하지만,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9계급 분류체계를
따르지 않고, 2계급 분류체계(연구관, 연구사)를
채택하고 있다.
- * 지도직 공무원도 2계급 분류체계를 따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급체계 이므로
제외한다.
- 그 이력을 살펴보면,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1981년 제정)에서 연구직
공무원을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 지었고, 2계급
분류체계를 택한 목적이 “연구직 공무원이 전문성에
기반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임을 알 수 있다.
- 연구직 공무원에게 전문성을 기대하여 2계급 체계를
채택하였지만, 현재 연구직 공무원들이 재직 중인

기관에서는 승진적체, 이로 인한 사기저하, 직원간 갈등, 낮은 보수 등의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문성 확보라는 최초의 목적이 제정 당시에는 의미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가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제도 연혁에 이어, 인사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을 이해하려면,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 '공직분류체계'란 공직의 구성 요소(사람, 직무)를 일정 속성에 따라서 구조화한 것을 뜻하고,
- 이는 공무원의 채용부터 평가 및 보상까지 전반적인 일련의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격의 공직자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류끼리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와 다른 분류는 다른 방식으로 취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 또한, 공직분류체계는 분류의 기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뉘어 지는데, '사람'에 두는 경우 '계급제', '직무'에 두는 경우 '직위분류제'로 구분된다.
- '계급제'의 경우 공무원(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 역량,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보아 공직을 다수의 계급으로 분류하는 체계이고,

- '직위분류제'의 경우 공직을 구성하는 직무를 난이도, 종류, 직무 수행을 위한 책임 등의 수준으로 공직을 다수의 계급으로 분류하는 체계이다.
- '계급제'를 따랐을 때, 동일한 직급(계급)인 경우 서로 성격이 다른 직무에 종사 중이라도 해당 계급일 경우 자격, 역량, 수준 등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인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다.
- 하지만 반대로, 직무가 유사한 성격이더라도 계급이 다르다면, 해당 직무를 위해 필요한 자격, 역량, 수준 등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동은 어렵다.
- 이를 종합해보면, '계급제'는 자신의 계급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위한 직급체계라고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직무분류제'를 따랐을 때는 동일한 직급(계급)일지라도 직무의 성격이 다르다면 동등한 위치일지라도 수평적인 이동이 어렵다.
- 반대로, 자신의 직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하면, 그 기간동안 해당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축적한 전문성을 해당 직무에서 발휘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수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위한 직급체계라고 볼 수 있다.

- 이렇게 인사제도의 이론적인 환경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식약처의 연구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면,
- 식약처의 연구직 공무원은 표면적·전반적으로는 '직위분류제'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2계급 분류체계(연구관, 연구사)를 택하고 있으며, 직무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해당 직급 내에서 수평적인 이동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계급제'의 성격을 띄고 있기도 한다.

○ 현재 인사제도에서의 연구직 공무원 현황

-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2022. 12. 27. 시행) 현재의 체계로 자리 잡았다.
- 연구직 공무원은 학예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나뉘고, 학예직군은 기록연구 등 4개 직렬, 기술직군은 공업연구, 보건연구 등 10개 직렬로 나뉘게 되는데, 현재 식약처에 재직 중인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은 기록연구, 공업연구, 보건연구 직렬이다.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가.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심리연구	심리	심리연구관	심리연구사
나. 기술	공업연구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공 화학 산업경영 물리	공업연구관	공업연구사
	농업연구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산업곤충 원예 생명유전 농촌생활 축산 농공 농식품개발	농업연구관	농업연구사
	임업연구	임업 산림조경	임업연구관	임업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수의연구관	수의연구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해양수산연구관	해양수산연구사

		수산가공 수산경제		
	기상연구	기상 지진	기상연구관	기상연구사
	보건연구	의학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약학		
		공중보건		
	환경연구	환경	환경연구관	환경연구사
	시설연구	토목	시설연구관	시설연구사
		건축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연구관	방재안전연구사
		재난관리		

< 표 6. 최근 연구직 공무원 직급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연구직 공무원의 현원을
알아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6천명 상당의
연구직 공무원이 근무 중이고,

직렬별	2021.12.31. 기준							
	연구직							
	소계		고위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소계	6,142	2,790	64	22	1,999	631	4,079	2,137
공업연구	521	112	3	2	217	32	301	78
보건연구	1,465	924	18	12	455	229	992	683

< 표 7. 연구직(보건, 공업) 공무원 현원표(출처: 국가통계포털) >

- 그 중 고위공무원은 64명, 연구관은 1,999명,
연구사는 4,079명이었다.

- 비율로 따지면, 전체 연구직 공무원 중 1% 정도가 고위공무원이며, 연구관은 33%, 연구사가 나머지 64%를 차지하는 셈이다.
- 위 표만 보아도, 연구직 공무원의 2계급 분류체계를 택하고 있는 탓에, 연구사 계급에 대부분의 연구직 공무원이 포진되어 있다.
- 또한, 위 표에서는 과장급 연구관과 무보직 연구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위 연구관 계급을 직위승진한 자와 직위승진 이전인 자로 나누게 되면, 상대적인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 물론, 연구관 정원 자체가 한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연구사 계급에서 연구관 계급으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의 변수 투입 없이 기본 운영체계에서 부터 제한적인 것이 확인된다.

○ 부처의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 검토

- 현재 식약처의 경우, '직무분류제' 차원의 연구직 공무원 운영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론적인 배경만 고려한다면, 연구직 공무원은 '계급제'와 '직무분류제'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재 식약처에서의 연구직 공무원 운영은 사실상 '계급제'로 운영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그 이유는, 연구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 '종류',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 전문성을 오랜 기간 축적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뒤 수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조치도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 일반 행정가 운영에 적합한 '계급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히 9계급이 아닌 2계급으로 직급이 분류된 공무원인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연구직 공무원은 현행법령상 강제적으로 2계급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계급제' 환경이 불리하고, '직무분류제' 환경이 유리하지만 실제 근무환경은 '계급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계급제'와 '직무분류제'의 역기능을 모두 적용 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 전문성을 기대하기 위해 직무분류체계를 적용했을 때의 장점이나 이점 등을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무 환경을 수평적 이동이 어렵고, 수직적 이동이 비교적 용이한 '직무분류제'의 방식으로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고,

- 이러한 직무 환경 적용이 어렵다면, 연구직 공무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현행 직무분류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9계급 체계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ART 2.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조직 구성을 고려한 기관 운영 방안 연구

□ 높은 여성 직원 비율에 따른 효율적 정책 연구

○ 여성 공무원 관련 제도 연혁

- 대한민국의 경우 1960년대 가파른 경제성장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여성 공무원의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 제도적인 장치로는 「남녀고용평등법」(1987 제정)을 통해 여성 공무원의 임용이 확대되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 1996년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시행, 1999년 여성 공무원 발전 기본 계획 수립 및 200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등의 수 많은 정책들의 추진을 통해서
- 여성 공무원에 대한 채용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서 불합리한 환경적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제거되었다.
- 이를 통해 여성 공무원의 수는, 2021년 중앙행정기관 현원 기준, 전체 직원 수 대비 여성 직원 비율이 48.2%를 기록하며
- 남녀 공무원 성비의 큰 차이가 없는 공직사회가 도래하였다.

○ 여성 공무원 관련 제도의 한계점

- 장기간 수 많은 제도와 정책의 시행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여성 공무원 수는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그 결과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직 내 남녀 공무원 성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
- 이러한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들은 결혼을 시작으로 출산, 육아 등의 기간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 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게 되고,
-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 단기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들은 일 가정 양립이 효과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조직과 업무 등에 몰입하지 못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유래 없는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시작해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반 기반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또한, 공직 내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진 지금, 여성 공무원의 조직 몰입 등을 위한

직무 환경 변화 등의 조치는 단순히 여성 공무원의 복리 후생 및 직업 만족도만을 위해서가 아닌, 가정, 조직, 국가 등 사회 전반적인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책 변화일 것이다.

○ 여성 공무원의 직무 만족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해당 연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여성 공무원의 직무 몰입, 직무 만족 등을 위해 제시하는 문제 해결 모델은 매우 다양하였다.
- 여성 공무원에 대한 편견, 전통적 가부장제와 연결된 성차별적 사회적 관습, 보수적인 공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성 평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이수 의무'
- 남성 선호주의 사고방식 등이 여전히 잔존해있는 공직사회에서 여성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 및 희망보직제 실시' 및 '여성 공무원 생애주기별 보직배치 모델 구축', '평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관련 행정기구 설치'
- 여성 공무원의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여성 공무원 맞춤형 전문교육 개발 및 강화', '경력 개발을 위한 후견인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었지만,

- 이러한 해법들은 여성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차별없이 조직에 몰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단순 보호 및 또 다른 구별점을 생성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다.
- 그렇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조직에서 당당하게 일원으로 인정받고, 조직에 몰입하여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향적인 근무환경 조성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단순히 격리하여 특별하게 우대 조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 공무원 스스로의 힘 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한 해법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보육수당 증액, 원활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통한 출산·육아휴직 활성화 효과 제고 등이 있다.
- 이 중 이미 대다수의 제도들은 많은 기관들에서 시행 중이고, 신선한 파급력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속적인 제도 강화와 정착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성화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 계층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며 제대로 정착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 여전히, 남성 공무원 및 관리자급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 인식, 대상자들의 권리가 아닌 기관장(부서장)의 재량 행위라는 편견 등을 공직 사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의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등 공급이 수요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여성 공무원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휴직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업무 공백은 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활성화 시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하지만,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과, 권리 보장이 타 직종 대비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 육아 휴직 인력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육아 휴직자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우수 여성 정책 사례를 모델링하여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맞는, 더 나아가 여성 공무원이 비율이 높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에 적합한 여성 공무원 지원 정책 사례를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국가	여성정책 사례
노르웨이	- 여성채용목표제 40% 확대 - 성 쿼터제 조항을 평등지위법에 추가 - 여성 지위 향상 및 촉진을 위한 행정 계획 시행
덴마크	-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정부행동계획 - 여성근로자 심야노동 제한을 위한 규정 폐지
독일	- 200명 이상의 기관 여성담당관 임명 - 주 공무원 여성할당제 실시(50%) - 가족 친화적 근무시간제 및 휴직제 도입

스웨덴	- 공공부문 정책결정기구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3개년 계획 시행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40% - 고위직 여성공무원 임명 20% - 교육훈련생 여성목표제 40% - 자녀 8세까지 1년 휴직(9개월간 보수의 90%)
프랑스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3) - 남녀직업평등법 제정(1987)
핀란드	- 여성할당제 40% - 외무부 평등인사행동계획 실시

참고자료: 여성공무원에 대한 균형적 인사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최정해 2005),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고나한
연구(정애숙, 2004)

< 표 8. 해외 국가 여성정책 사례 정리 >

PART 3. 본부 소재지가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부처 특성을 고려한 기관 운영 방안 연구

□ 근무환경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근무환경 인식 관련 개념

- 근무환경은 관점에 따라서 작업환경, 업무환경, 직무환경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근무환경이 객관적이기 보다 조직 구성원들이 근무환경을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 이는 직무 관련 특성,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근무현장의 여러가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 추가로, 근무환경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근무환경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대표작으로 고를 수 있는데, 이 연구 결과 근무환경이 직무에 필요한 창의적 요구사항을 보완할 때, 직무만족이 높아지며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세종 이전 정부부처 공무원의 근무환경인식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세종 이전 정부부처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으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동이 일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류현숙, 홍승희 2013) 내용을 보면,
- 1단계 세종 이전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개의 영역별 요인(생활환경, 근무환경, 업무효율성, 이주 및 통근)을 구성한 뒤,
- 해당 이전 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한 결과,
- 이주 및 통근, 통근환경 변화체감 정도에 대한 만족도 모두 직급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이주 및 통근, 근무환경, 업무효율성, 생활환경의 각 하위 지표가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해당 연구에 추가적으로 1, 2단계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가지 영역(근무환경, 통근환경, 업무효율성, 교육 의료 등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변화 관련 조사 및 연구(정의룡, 2014)를 확인한 결과,

- 결혼하지 않거나, 가족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 불만족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 통근에 관련된 불만족 수치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교통 관련 인프라에 대한 확충 필요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 그리고 근무환경 변화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고, 주차, 외식 관련 불만은 전년도와 유사했지만 문화생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업무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와 국회 및 개인 업무 효율 모두 세종 이전에 따라 저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회 분원 또는 이전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그리고 생활환경 파트에서는 의료시설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확인되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하였다.
- 최종적으로, 근무지의 소재지 이전으로 인해 강제적인 거주지 이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통 관련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가족 및 친구 등 인간 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 **본부 소재지가 지방 이전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기관 운영 방안(세종시 이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 결혼하지 않거나,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된 거주 형태를 보이는 미혼 직원들에 대해,
 - 본부 발령에 따른 충청권(오송) 거주 여건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 해당 계층에서 발생하는 불만족 요인이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수행을 통해,
 - 지방 거주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고,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시스템을 개발·시행하고,
 - 더 나아가 직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당 조사와 후속조치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간담회, 국제행사 참석, 입법 추진 등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처 특성상 충북 오송에 소재할 경우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서울 등 높은 빈도로 방문하는 장소들에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통해 업무효율성에 대한 근무환경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재한 충북 오송의 경우 생활환경, 교통, 의료와 관련된 인프라는 앞서 살펴본 세종시에 비해 훨씬 열악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 및 공동 사업 진행을 통해 오송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직원들의 불만족 요인이 감소하고, 이직의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 > 정치 > 일반행정

충북경자청 "2년 내 인구 6만... 청주 오송 정주여건 개선 총력"

오송 컨벤션 센터·국제학교 유치·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등 사업 추진

2022.12.19 17:46:51



+ 크게보기

【충북일보】 청주시 오송읍이 2024년까지 인구 6만 명의 국제도시 위상을 갖출 전망이다.

19일 충북도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오송바이오폴리스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오송읍에는 각각 1만2천여 세대와 6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민 유입이 이루어지면 2년 내로 인구 6만 명의 도시가 형성된다. 올 12월 현재 오송읍 인구는 2만4천700여 명이다.

경자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과 함께 오송 컨벤션 센터 개관, 국제학교 유치,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K-뷰티스쿨 건립, 오송컨벤션센터 개관에 따른 마이스산업 전진기지 육성, 스타트업 허브도시 조성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기존 개발 패러다임을 '국제도시'로 수정한 경자청은 글로벌 정주여건을 갖춘 비즈니스 허브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오송에 동지를 둔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여건 향상에 초점을 맞춰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에 외국인 국제학교 설립 방향을 마련하고 개교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화장품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K-뷰티스쿨 설립과 외국 문화특화거리도 조성된다.

경자청은 올해 2조 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호텔·오피스텔·마트 등 1조3천731억 원 규모의 서비스업 투자를 유치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청주시와 함께 29개 과제도 추진 중이다. 콜버스 도입을 성사시킨 경자청은 내년에 오송호수공원과 충북C&V센터 등에 공공와이파이 프리존 구축과 초소형 전기공유차 운행 등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오송1산단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온개발과 MOU를 체결, 오피스텔도 건립 중이다.

이외에도 오송국제도시의 성공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등 자치단체와 회의, 포럼, 정보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맹경재 청장은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2030년 오송이 중부권 유일의 인구 10만의 국제도시가 되는 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 사진 5. 청주 오송 정주여건 개선 관련 뉴스기사(출처: 충북일보) >

○ 기관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환경 인식 개선이
시급한 사유

- PART 3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관 특성이 지방으로 본부 소재지를 이전한 정부부처임을 고려하여,
- 앞 단에서 근무환경 인식에 대한 이론적 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사한 상황인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초창기)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등을 기술하였고,
- 이를 통해, 재직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의 근무환경 인식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분석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였다.
- 이 부분에서 기관 운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무 중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업무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약학, 의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
- 국민 안전과 직결된 허가·심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송 이전이 계획되었을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

오송行 식약청 인력확보 `비상`

입력 : 2010-01-18 16:42:31 수정 : 2010-01-18 19:17:01

가 ㉠ ㉡ ㉢ ㉣

11월부터 특수장비·실험동물 이전...비정규직 54% 이직 예상



식약청 등 국책기관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전경.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된다면 9부2처2청이 한번에 자리를 옮겨야 한다. 건설비용은 그렇다치고 이전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 오송으로 이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사하는 데 3개월 정도 시간과 213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마련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식약청은 오송청사 준공 예정 시점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청사 이전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전 예산으로 총 213억원이 책정됐다.

식약청은 전체 정원이 1300명 정도로 청단위 기관 중 큰 편은 아니다.

이전비용이 이처럼 많이 드는 것은 식약청 업무 특성 때문이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검정과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특수장비와 실험 동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 사진 6. 식약청 오송 이전에 따른 우려 기사(출처: 매일경제) >

-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현실화되어,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결국 수도권에 임상심사위원회 사무실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환경 인식 개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무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훈련 과제를 통해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기관 운영 방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점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었다.

각 기관마다 저 마다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효과를 기대한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날지 모르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부처의 특성을 크게 3가지(인력 구성의 다양성, 높은 여성 직원 비율, 지방 이전한 정부부처)로 나누어 훈련과제 분석 및 연구를 진행하였고, 효율적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이 타 부처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타 부처의 일반적인 인사관리 제도 적용이 아닌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관리 제도를 발굴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그 과정에서 확인한 직무분류체계의 의미와 연혁, '계급제', '직무분류제'에 대한 개념을 연구직 공무원 운영 현황에 접목시켜 추가적으로 연구한 결과, 연구직 공무원이 현행의 일반적인 '계급제' 위주의 인사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2.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적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기에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직무 몰입, 직무 만족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3. 본부 소재지가 지방 이전한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무환경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근무환경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이 확인되었음.

또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현재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현재의 연구 방안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참고문헌

- － 제도·조직구조·직무특성 요인이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왕태규 이희재, 2021)
- － 여성 공무원의 조직지원과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윤정, 김숙일, 2022)
- － 근무환경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이재관, 2018)
- － 여성 공무원의 조직지원과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윤정, 김숙일, 2022)
- －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효율적 인사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박정미, 2018)
- －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여성공무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박승규, 2021)
- － 공공기관의 종사자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승진과 일가정지원, 지방이전을 중심으로(이주경, 박한준, 2021)
- － 공공기관의 종사자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승진과 일가정지원, 지방이전을 중심으로(이주경, 박한준, 2021)
- －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혁신방안(유상엽, 김지성, 2018)